

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663호
2. 발 의 자 : 김길영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3. 29.
4. 회부일자 : 2023. 4. 3.

II. 제안이유

- 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. 공청회, 온라인 채널 등 의견을 개선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도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기에 폐지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폐지함.

I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김길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663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현재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확장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 운영중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이 공청회,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계층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, 이러한 공론화의 장은 확장 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에 ‘편안한 교복’을 시작으로, ‘학원 일요휴무제’, ‘코로나시대, 서울교육에 바란다(온라인수업, 학습격차, 디지털 시대 성교육)’, ‘디지털기반 학습의 발전방향’, ‘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방안’ 등 다양한 정책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 숙의과정을

진행한바 있습니다.

-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 후인 2022년에 ‘코로나19 학교의 회복탄력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’ 라는 의제를 가지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설문조사와 함께 숙의과정(시민대토론회)을 진행한 바 있으며,

금년도에도 기존에 추진해왔던 공론화사업 방식에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추가하기 위해 5억 5천 6백만원(전년대비 1억 8천 5백만원 증액)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.

[표-1] 최근 4년간 공론화 추진 현황 및 절차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형태	찬반형	토론형	토론형	토론형
의제명	-학원 일요휴무제	1. 온라인 수업 등교 형태, 학습권 보장 2. 학교 간 학교 내 학습격차 해소방안 3.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	1.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도구 기반 학습의 발전방향 2.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방안	-포스트 코로나시대, 교육 회복 지원방안
공론화 방식	-여론조사 23,500명 -200명 참여단 구성 -오프라인 토론회 2회	-여론조사 3,000명 -의제별 100명 참여단 구성 -온라인 토론회 3회	-여론조사 1,500명 -의제별 100명 참여단 구성 -온라인 토론회 1회	-여론조사 1500명 -참여단 110명 구성 -오프라인 토론회 1회
소요액	186백만원	196백만원	162백만원	105백만원



[표-2] 최근3년간 공론화사업 위원회 개최 현황

연도	위원회명	회의 개최수	회의개최일	회의내용(회의 안건명 등)
2020	공론화추진 위원회	5	2020-10-12	2020. 공론화 의제 단계별 세부 절차 기획 및 결정 등
			2020-10-28	의제1,2 공론화 의제 사전 여론조사 방안 및 온라인 숙의 진행방안 논의
			2020-11-11	사전여론조사 결과 공유 및 활용방안, 의제3 진행방향 검토
			2020-12-01	의제3 사전여론조사 결과 공유 및 숙의 진행방안 논의
			2020-12-23	2020. 서울교육 공론화 결과 정책 권고안 논의
2021	공론화의제 선정위원회	2	2021-08-18	(서면) 의제선정위원회 위원 의견수렴(우선순위 및 기타의견)
			2021-08-23	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
	공론화추진 위원회	5	2021-09-08	(서면) 공론화 의제 관련 사전 의견수렴
			2021-09-10	2021. 공론화 의제 단계별 세부절차 기획 및 결정 등
			2021-10-05	사전여론조사 설문안 및 진행방안 등 확정 시민참여단 세부구성방안 논의
			2021-10-29	의제별 사전여론조사 결과 안내 숙의프로그램구성안 및 사후설문지 구성안논의
2021-11-23	시민참여단 최종설문 결과 보고 공론화백서 작성 등			
2022	공론화의제 선정위원회	2	2022-09-15	(서면) 의제선정위원회 위원 의견수렴(우선순위 및 기타의견)
			2022-09-21	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최종 의제 선정
	공론화추진 위원회	5	2022-09-30	서울교육 공론화 최종 의제명-세부의제 확정 논의
			2022-10-05	(서면) 공론화 추진 방향 의견 수렴
			2022-10-14	사전여론조사 설문안 검토 및 확정 숙의자료집 제작안
			2022-10-31	(서면) 사전여론조사 결과 보고 및 활용방안 검토 및 확정 (서면)숙의토론회 진행방안 검토 및 확정
2022-11-25	서울교육공론화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 결과 보고 공론화백서 및 정책권고안 확정			

○ 그러나 교육청의 ‘공론화사업’은 동 조례의 제정 전후 사업성과와 방식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바, 조례 제정의 입법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그러나 동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된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경과되었는 바, 조례 제정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공론화 과정은 공청회 및 온라인 채널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, 동 조례를 폐지할 경우 공론화 추진을 위한 계획과 추진 과정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나 운영 조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공론화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따라서 동 폐지조례안은 조례 입법정책상 필요성과 조례 시행에 따른 입법경제상 효과 그리고 조례시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및 정책 추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5353.,2023.4.7.)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이준석 2180-8263	입법조사관	정진국 2180-8265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